

[기획]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위기 농가 재기 돕는다

✎ 김도윤 기자 | ⓒ 승인 2026.09.03 16:21

김철상 지사장 “농지 지키며 영농 기반 회복하도록 든든한 버팀목 될 것”

최근 농업 현장은 이상기후의 일상화와 고물가에 따른 생산비 상승, 금리 부담까지 겹치며 어느 때보다 큰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생산비는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은 출렁이고, 자연재해는 매년 반복되면서 자금 부족과 부채 문제로 고통받는 농업인에게는 영농 지속 자체가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이처럼 한계 상황에 내몰린 농업인들은 결국 당장의 부채 상환을 위해 농지 매각을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농업인에게 농지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다. 삶의 터전이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생산 기반이며, 지역 농촌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자원이다.

이런 농지를 한 번 잃게 되면 영농 기반 회복은 물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큰 상처가 남는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농지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안전망은 지금 농촌 현장에 가장 절실한 정책 수단 중 하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지사장 김철상, 사진 정중앙)가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일시적 경영 위기에 놓인 농가에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농지은행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 하락, 경영비 증가, 과도한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는 제도다.

농업인은 그 대금으로 급한 부채를 상환해 신용 회복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강점은 농지를 매도한 뒤에도 곧바로 영농 기반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농업인은 매각한 농지를 장기 임대 방식으로 다시 이용하면서 기존 농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후 경영이 회복되면 환매를 통해 다시 농지를 되찾을 수 있다. 단순한 채무 정리 차원을 넘어 농업인의 자존감과 영농의 연속성을 함께 지켜주는 회생 장치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광주지사는 이 같은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담 단계부터 농업인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사업 대상 여부, 채무 부담 수준, 영농 지속 가능성, 환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농업인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단순한 행정 처리를 넘어 위기 농가의 사정을 함께 고민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으로 위기 농가의 재기를 돕고 있다.

특히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 현장에서는 농지를 공공기관에 매도한다는 심리적 부담이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상담과 신청을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광주지사는 제도가 필요한 농업인이 제때 정보를 얻지 못해 지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역 농업인 단체, 작목반, 청년농업인 조직,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 홍보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제도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광주지사는 지역 특성상 농업인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도시화와 개발 압력 속에서 영농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쉽지 않은 환경인 점을 고려해 세심한 공공 지원과 맞춤형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현재까지 광주지사는 위기에 처한 35농가를 발굴해 120억원을 지원했다. 해당 농가들이 자력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건실한 농업인으로 재진입한 환매 실적은 22건에 달한다.

지원 수치 자체보다도 위기 농가가 농지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지역 농업 현장에 분명한 희망의 통로가 되고 있다. 향후 광주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과 적극적인 현장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농업인에게 회생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농업은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 식량안보를 떠받치는 생명 산업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이 영농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재기할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일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다.

이처럼 광주지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지역 농업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와 시간을 제공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김철상 광주지사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 경영 위기에 놓인 농업인이 농지를 지키면서 다시 영농 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현장 상담과 제도 안내를 강화해 도움이 필요한 농업인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